

억지 삶 대신 자연스런 죽음 선택...임종 문화 바뀌나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시행 한달...생명 연장 중단 7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호남 49명 등 전국 2197명 서명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시행 한 달 만에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합법적 죽음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우리 사회의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는 방증으로 의료 당국은 진단하고 있다.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전국적으로 2000명을 넘어섰으며, 광주·전남 등 호남권에서도 49명이나 서명했다. 시범사업 기간인 현재 호남권에 연명의료계획서와 의향서를 작성할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수

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부터 지난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은 환자나 가족이 품위있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다양한 질병으로 임종 과정에 들어선 이들은 합법적으로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하고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등의 3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성인이면 질병 유무를 떠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신청 기관이 전국적으로 5곳에 불과한데다,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에도 시범사업 한 달 만에 무려 2197명이 서명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681명, 경기 608명, 충청 343명, 대전 137명, 인천 78명, 전남·북 44명, 강원 29명, 경상 26명, 부산 22명, 대구 12명, 울산 12명, 세종 1명, 제주 6명, 광주 5명 등이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환자의 참여율은

저조해 임종기에 환자나 가족만 신청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수는 11명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례의 경우 뚜렷한 증거세를 보이는 등 ‘웰다잉(Well-Dying)문화’가 뿌리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웰다잉’이란 용어는 지난 2009년 2월 선종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무의미한 생명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런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병원 중환자실장 안영준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나 가족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토록 하는, 이른바 임종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라며 “안락사 등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임종과정의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이행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이다.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검찰, 판결 불복 상고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까지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방승인 이창명(47)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를 들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28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5·18암매장 발굴 조사, 교도소 5곳·너릿재 터널 확대

계엄군·레이더 탐지 바탕 조사

특조위 내년 2월까지 활동 연장

잠시 중단됐던 옛 광주교도소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가 신순용 전 소령 등의 증언(광주일보 11월13일자 1·3면)과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굴 조사에 들어간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부대의 증언과 레이더 탐지 결과를 종합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 5곳과 광주~화순간 너릿재터널 인근 1곳을 의심지역으로 보고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재단이 이날 공개한 조사 예정지점은 GPR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도소 북쪽 테니스장 주차장 인근 ▲북쪽 담장 철제펜스 바깥쪽 ▲화순쪽 너릿재터널 인근 등 3곳을 비롯한 신 전 소령 등이 지목한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도소 남서쪽 감시탑 인근 ▲교도소 북쪽 야산 인근 ▲교도소 북쪽 공동묘지 진입로 등 총 6곳이다. 증언을 종합하면 이들 지역 내 암매장 시신수는 최소 4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너릿재터널 인근 부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와 협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너릿재 인근은 5·18 당시 7공수여단이 주

둔한 곳으로, ‘5·18 직후 대낮에 군인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해 마대자루를 묻고 있었으며 자루 밖으로 나와있는 시신의 머리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진 곳이다.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 때 유력한 암매장지로 거론됐던 교도소 공동묘지 인근은 지형지물이 많이 달라져 조사 우선 순위에서 빠졌다.

현재까지 증언한 3공수여단 부대원들의 소속은 본부대대·11대대·15대대이며, 재단은 나머지 13대대와 16대대 부대원과도 접촉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또 ‘교도소 담장 밖에서 군용 포크레인을 봤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1980년 당시 광주에 파견된 아전공병단

상황일지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20여년 전 포크레인을 봤다고 제보했던 당시 재소자를 최근 다시 조사한 결과, 수감건물 옥상에서 군용 포크레인을 봤다는 내용을 추가로 진술함에 따라 아전공병단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연계해 당시 상황일지, 작업일지 등을 입수한 뒤 기존 제보지역과 대조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는 내년 2월1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지난 9월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특조위는 검토해야할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 면담이 미흡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 연장을 요청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외국인선원 고용하며

의무 보험 가입 안해

양식업자·선주 등 12명 적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어선 선주들이 해경에 대거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청은 28일 “지난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의 행정고발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서모(46)씨 등 양식업자·어선 선주 1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로 종합 양식장을 운영하는 서씨 등 양식업자·선주들은 스키랑가 국적 등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지만 의무가입대상인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국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월 급여의 8.3%)과 임금체납을 대비해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보증보험(연 1만6000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사업주와 고용주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 소액이고, 관심 부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관련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주들이 기본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권익 보호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택시기사가 여성승객 보며 음란행위



○...범일이 택시 뒷자리에 탄 30대 여성 승객을 백미러로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5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형.

○28일 전주지법(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 A(57)씨는 지난 2월 12일 낮 12시에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범원은 “택시 CCTV 모습이 찍혀 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향)

■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제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 010-7384-7800